공인중개사 교육 예산지원 추진 논란

공인중개사협회 정기연수 교육비 지원 요구
다른 국가자격증 소지자들과 형평성 문제
중개사 출신 광주시의원이 조례안 추진 논란

광주시의회가 광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정기연수 교육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점과 다른 국가자격증 소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29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산1)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검토키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지원 근거로 삼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용은 6만원 가량이다.

정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은 4000여명으로 광주시 예산으로 교육비용을 지원할 경우 2억4000여 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 예산으로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소속 회원인 공인중개사인 데다, 다른 국가자격증 협회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공인중개사 연수비용 지원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주관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했으나 참여 인원이 많아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예산 부담도 커 내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올해 8~9월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실무부서 관계자는 "특정 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경찰조사때 변호인 동반 43% ↑…인권보호 강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1년새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으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1만6252건으로, 이전 해(2017년 3월~2018년 3월 1만1354건)보다 43.1%가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할뿐 아니라 휴식 요청권을 부여하고, 변호인 참여 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지역별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한다.

뉴시스

봉사활동 하는 군장병들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29일 오전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21항공단 장병들이 6·25 참전용사 묘비를 닦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요양서비스 노조 "표준임금 보장 등 처우개선" 촉구

광주지역 재가(在家)방문 요양보호사들이 29일 표준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는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가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 시급은 1만1937원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시급이 9500원부터 1만500원까지 다양하다. 주휴·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시급은 753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실정이다"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표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호센터·자치단체 별로 시급과 수당체계도 다르다. 이는 노인돌봄 재가요양서비스가 공공서비스임에도 민간 기관에만 맡기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의 표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하루 2~6시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표준임금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재가 요양보호사는 치매 노인의 욕설과 폭행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면 참아야 하는 감정 노동자다"면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폭력으로부터 보호,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제정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다"고 비판하면서 "광주시가 즉각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연차휴가 보장도 요구했다.

이들은 "요양서비스 대상인 노인의 갑작스러운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센터 간 경쟁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 해고된다"면서 "3개월 이내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기근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분실물 찾으러 파출소 찾았던 수배자 '덜미'

30대 남성이 분실물을 찾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서구 농성파출소에 한 행인이 찾아와 '길에서 주웠다'며 지갑과 휴대전화를 맡겼다.

경찰은 습득한 휴대전화를 통해 주인 A(28)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시께 분실한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 파출소를 방문했다.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파출소에 들어선 A씨는 '분실한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해야 분실물을 찾아갈 수 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내가 주인이 맞다. 그냥 돌려달라'며 떼를 썼다.

경찰이 거듭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마지못해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건네받은 신분증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부과된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검찰에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파출소 문을 잠가 도주로를 차단한 뒤 A씨를 붙잡았으며, A씨를 수배한 광주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기장 증축현장서 작업자 추락 1명 사망

29일 오전 8시4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증축현장에서 작업자 A(54)씨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경기장 내 천장에 설치된 안전망을 철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기간 중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는 관람석 의자를 설치하는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보성 교차로서 버스·화물차 충돌 7명 경상

29일 오전 9시3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A(38)씨의 시외버스와 B(33)씨가 몰던 2.5t급 화물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명과 B씨 등 화물차량 탑승자 2명 등 총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1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로 보고 두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공구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공구를 이용해 인형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만 턴 혐의(절도)로 안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광주지역 일대 인형뽑기방 11곳에서 공구로 지폐교환기를 파손하고 670만 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인형뽑기방을 찾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철물점에서 '대형 드라이버'를 구입한 뒤 지폐교환기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어머니 폭행 사망' 40대, 구속송치

같이 살던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47)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양어머니 B씨의 머리, 복부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폭행 이틀 뒤인 16일 "할머니가 쓰러졌다. 숨을 쉬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